

---

**탄소중립·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 
제1차 국가 기본계획 요약**  
**[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포함]**

---

2023. 4.

**관계부처 합동**



## 목 차



I. 개요 및 수립경과 .....	1
II. 기후변화 현황 .....	3
III. 그간 정책에 대한 평가 .....	5
IV.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 .....	7
V. 중장기 감축목표 .....	10
VI.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.....	12
VII. 재정투자 계획 및 경제적 기대효과 .....	23
※ 참고 : 달라지는 미래 모습 .....	24

# I. 개요 및 수립경과

## 1. 개요

### 국가 전략

- **(개요)** 정부는 국가비전\*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 수립(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제2항)
  - \* 국가비전 :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
  - 5년마다 기술적 여건과 전망,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
- **(의의)**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전략으로,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, 국가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
  - 환경·에너지·국토·해양 등 관련 정책계획 수립 시, 본 국가전략과 중장기감축목표, 국가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

### 국가 기본계획

- **(개요)**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(탄소중립기본법 제10조제1항)
  - 20년을 계획기간('23~'42)으로 하여 5년마다 연동계획으로 수립·시행
- **(의의)** 탄소중립·녹색성장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정책의 비전 설정
  -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, 기후변화 적응 등 하위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에너지 등 관련 계획과 정합성 제고
  -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명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연도별·부문별 감축목표 포함

---

## 2. 수립경과

---

- '22.8월, 연도별·부문별 감축목표 수립을 위한 범부처 기술작업반 구성·운영(10개 부문, 총 80회 회의 개최)
  - \* 감축·흡수를 포함하여 10개 부문별로 연구기관·전문가 등 참여
- '22.10월, 「탄소중립기본법」에 따른 제2기 '2050 탄소중립·녹색성장 위원회' 출범
- '22.10월, '탄소중립·녹색성장 추진전략' 수립
  - \* ① 책임있는 실천, ② 질서있는 전환, ③ 혁신주도 탄소중립·녹색성장을 3대 정책 방향으로 하여 4대 전략·12대 과제 마련
- '22.11월~, NDC 이행로드맵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회의
- '22.11월~,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회의
  - \* 분야별 협·단체, 대·중소 기업 단체, 철강·석유화학 등 기업체, 지자체 등 총 20회
- '23.2월~,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한 국가 기본계획 정부안 초안 마련
  - \* 부문별·연도별 감축목표 및 감축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방안 적절성 검토
- '23.2월,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민간위원 검토
  - \* 탄독위 4개 분과별로 진행(온실가스 감축 분과, 에너지·산업 전환 분과, 공정전환·기후적응 분과, 녹색성장·국제협력 분과)
- '23.3월, 대국민 공청회(온·오프라인 병행)를 통해 의견수렴
  - ※ 추후 탄독위·국무회의 심의·의결 후 계획 확정(예정)
- '23.3월~, 과학기술계, 노동계, 지역사회, 중소·중견기업, 청년·시민 단체 등 이해관계자 토론회·간담회 추가 진행

## II. 기후변화 현황

### 1. 전 지구 기후변화 현황

- **(기온)** 최근(2011~2020년) 전 지구 연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(1850~1900년)보다 1.09℃ 상승(IPCC, 2021)
  - 최근 8년('15~'22년)이 관측 기록상(1850년~) 가장 따뜻한 8년(WMO, 2022)
- **(이상기후)** 세계 각지에서 폭염·홍수 등으로 인한 인명·재산피해 발생
  - (폭염) '20.8월 북미대륙의 평균기온이 역대 1위(테스밸리 54.4℃), '22년 인도 중부의 4월 평균 최고기온이 37.78℃로 121년 만에 4월 최고기온 기록 경신
  - (홍수) '22.6월말 ~ 9월 파키스탄 홍수로 1,700여 명 사망

### 2. 우리나라 기후변화 현황

- **(기온)** 최근 30년(1991~2020년) 연평균기온은 과거(1912~1940년)에 비해 1.6℃ 상승하였고, 10년마다 0.2℃ 상승
  - \* 그 외 최고기온 1.1℃ 상승, 최저기온 1.9℃ 상승, 열대야일수 8.4일 증가, 결빙일수 7.7일 감소
  - 여름 길이는 20일 증가, 겨울 길이는 22일 감소
    - \* 최근 30년 여름은 118일(약 4개월)로 가장 긴 계절이며, 가을은 69일로 가장 짧음
- **(이상기후)** 최근 폭염·호우 등으로 인해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 체감 증가
  - (호우·태풍) '20년 최장기간 장마(중부 54일) 발생, '22년 초강력 태풍인 '힌남노'로 강수량 기록 경신(경주 212.3mm(1위 경신), 포항 342.4mm(2위 경신))
  - (폭염) 2016년 연 평균기온 1위(13.6℃), 2018년 여름철 극심한 폭염과 열대야 발생(여름철 평균기온 역대 1위, 전국평균 폭염일수 31.4일로 역대 1위)

### 3. 글로벌 대응 동향

- **(글로벌 동향)** '15년 파리협정 체결('16.11월 발효) 계기로 선진국·개도국 포함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여 등 압박 증대
  - '23.1월 세계경제포럼(다보스포럼) '글로벌 위험 보고서 2023'에서 선정한 향후 10년간 가장 심각한 위험 10개 중 1~4위\*가 기후·환경 관련 사항
    - \* ①기후변화 완화 실패 ②기후적응 실패 ③자연재해극단기상현상 ④생물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
- **(탄소 경제)** RE100 확대, ESG 경영 강화, 탄소국경조정제(CBAM) 도입 등 국제사회에서는 탈탄소 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급속히 전환 중
  - **(RE100)** 애플 등 주요 글로벌기업에서 재생e 전력 사용을 협력업체까지 확대 요구하면서 자발적인 캠페인 → 무역장벽으로 역할 강화
    - \* RE100 참여기업 : 전 세계 403개사, 우리나라는 29개사 참여 중('23.3월)
- **(新 전략 발표)** 기후대응·에너지전환을 위해 주요국의 수정전략 발표
  - **(美 IRA)** 물가안정·기후대응을 위해 청정에너지·조세 등 계획 수립('22.8월)
    - \* 총 4,330억 달러 규모,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만 3,690억 달러 지출
  - **(EU 그린딜 산업계획)** IRA에 대응하여 EU 탄소중립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△규제완화, △재정지원, △역량강화, △공급망 확보 등 계획\* 발표('23.2월)
    - \* 탄소중립산업법 제정, 재생e 보조금 지급절차 간소화, 탈탄소 산업공정 촉진 보조금 상한액 상향 등

#### 〈 주요국 동향 〉

 EU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감축목표) '50년까지 탄소중립, '30년까지 '90년 대비 55% 감축</li> <li>○ (탄소국경조정제도) 철강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('26~)</li> <li>○ (RePowerEU) △에너지 소비절감, △공급망 다변화, △재생e 보급 확대 등 발표('22.5월)</li> </ul>
 미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감축목표) '50년까지 탄소중립, '30년까지 '05년 대비 50~52% 감축</li> <li>○ (인플레이션감축법) 기후변화 대응에 3,690억\$ 투자 추진('22~)</li> </ul>
 영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감축목표) '50년까지 탄소중립, 30년까지 '90년 대비 최소 68% 감축</li> <li>○ (원전확대) 에너지안보를 위하여 '50년까지 최대 8기 추가 건설 계획 발표('22)</li> </ul>
 일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감축목표) '50년까지 탄소중립, 30년까지 '13년 대비 46% 감축</li> </ul>

◆ 기후·에너지 위기에 대한 국제 동향에 적기에 종합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전체가 신속하게 기후 친화적으로 사회·경제 패러다임 전환 필요

### Ⅲ. 그간 정책에 대한 평가

#### 1. 그간의 기후변화·녹색성장 정책

- **(태동기)** 기후변화대응·녹색성장 정책의 태동 단계('09~'14)
  - 녹색성장 국가전략기본계획 수립('09) 및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정('10)
    - \*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장기(~'50) 및 단기(5개년, ~'13) 전략 수립
  - 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\* 수립('14) \* '20년 BAU 대비 30% 감축
  
- **(확대기)** 기후대응 정책의 확대 단계('15~'19)
  -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\*('15) 및 로드맵 수립('16)
    - \* '30년 BAU 대비 37% 감축
  -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\* 수립('16)
    - \* 기후변화 전망, 감축·적응 대책 등 포함하는 20년간의 계획
  - 2030 로드맵 수정\*('18) 및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('19)
    - \* 국가 감축목표 BAU 대비 37% 중 국내 감축 확대 (25.7%p → 32.5%p)
  
- **(도약기)** 탄소중립의 대두와 제도적 기반 마련('20~)
  - 2050 탄소중립 선언('20)
  - 2050 탄소중립위원회 구성('21) →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개편('22)
    - \* (근거) 「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 →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('22.3월 시행)
  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정('21)
    - \*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, 2030 NDC 목표 명시
  -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('21)
    - \* '50년까지 순배출량 0 달성, '30년까지 '18년 총배출량 대비 40% 감축

## 2. 그간의 정책 평가

- **(성과)**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,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이행기반 마련
  - 탄소중립 법제화와 기후 대응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\*를 신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탄소중립·녹색성장 이행기반 구축
  - \* 탄핵위 설치, 기후대응기금 조성,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등
- **(보완사항)** 목표 수립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, 체계적 이행의 부족으로 '18년까지 배출량 증가 및 국제사회의 지적 계속
  - 실행방안의 구체성 및 이행관리, 민간, 지자체 등 사회구성원의 참여 유도, 현실 여건을 고려한 에너지믹스 등의 관점에서 미흡했다는 평가

⇒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, 미비한 점은 보완하여 **탄소중립·녹색성장 달성**

## 3. 시사점 및 정책방향

- ① 실질적 이행을 위해 부문별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단 설계 필요
- ② 민간·지자체 등 사회 전체의 협력을 유도하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 필요
- ③ 기술·산업 혁신을 통한 능동적인 탄소중립·녹색성장 추진 필요
- ④ 상시 이행관리·범부처 통합 지원체계 구축으로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관리 필요

### 【 탄소중립·녹색성장 정책방향 】

기존에는 (AS-IS)	앞으로 (TO-BE)
실행방안 미흡	실행방안 구체화
원전 등 무탄소 전원 활용 미흡	균형잡힌 에너지 믹스 (원전+재생e)
정부 주도	정부+지역·민간 주도
수동적 대응	혁신 주도의 능동적 대응
부처별 산발적 지원	범부처 통합 지원
이행점검 체계 미흡	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관리

# IV.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

## 1. 전략 체계도



## 2.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 추진과제

### ① 구체적·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

① (원전 + 재생e 조화) 원전 확대 및 재생e와의 조화로운 활용, 석탄발전 감축 및 무탄소 新전원 도입,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 전원믹스 합리화

\* 원전 : 신한울 3·4호기 건설재개, 운영허가 만료 원전(~'30년 10기)의 계속 운전  
석탄발전 : '30년까지 노후 석탄발전기 20기 폐지(現 석탄발전 58기 운영 중)

② (산업구조 전환) 세액공제·금융 등 총력지원을 통해 공정전환 및 순환경제 활성화로 ①연·원료 → ②공정 → ③제품 → ④재활용 전과정에서 탄소중립 실현

\* 녹색정책금융 활성화(이차보전, 산은·신한, '22~),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용자 등

③ (국토의 저탄소화) 건물 에너지 자립 강화, 무공해 모빌리티 확산, 환경친화적 농축수산 전환, 산림·습지의 탄소흡수원 확충

\* 제로에너지 건물 의무화(1천㎡ 이상('25) → 5백㎡('30)),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('25~)

\*\* 수소·전기차 보급률 : ('22) 1.7%(43만대) → ('30) 16.7%(450만대) → ('50) 85%~97%

### ②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·녹색성장

① (기술혁신·규제개선) 기후기술 기획부터 상용화까지 전과정 관리, 전문인력 양성,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으로 탄소중립 가속화

\* 한국형 100대 핵심기술 도출 → 분야별 R&D 로드맵 수립

② (핵심산업 육성)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수출 산업화, 무공해차·재생e·수소 산업·CCUS 육성 등 미래시장 선도

\*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한 수주 지원 및 대상국별 맞춤형 수주전략 추진

\*\* 전기차 : (1회 충전 주행거리) 現 500km → ('25) 600km, (충전속도) 現 18분 → ('30) 5분  
수소상용차 : (내구성) 現 30만km → ('30) 80만km, (연비) 現 13km/kg → ('30) 17km/kg

\*\*\* CCUS 전담법 제정 추진 및 동해 가스전 활용 CCS 실증 인프라 구축

③ (재정지원·투자확대) 기후대응기금 등 재정지원 및 K-택소노미에 따른 민간 투자 활성화,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등으로 탄소중립 정책 뒷받침

\* 유상할당·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ETS 개선, 배출권 위탁매매 도입 등 시장 활성화

### ③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중립

① **(에너지소비절감)** 에너지 수요효율화 및 제도 개혁,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, 국민 인식 제고 및 소통 확대 등으로 탄소중립 실현

- \* △산업 : 多소비 기업 자발적 효율혁신 협약 추진 대기전력저감효율등급제 등 효율관리제도 효과 제고  
△가정·건물 : 에너지캐쉬백 가입 촉진, △수송 : 전비 등급제·중대형 화물차 연비제도 도입

② **(지방 중심)**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·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하고, 지역 단위 탄소중립 추진체계 구축으로 탄소중립·녹색성장 정책 수립·추진 내실화

- \* 지역 맞춤형 : 대도시 집중형(서울, 대전), 산업·발전 특화형(충남, 전남), 복합형(경기, 부산)
- \*\* 탄소중립·녹색성장 조례 제정, 지방위원회 구성,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등 이행체계 구축

③ **(산업·일자리 전환)** 입·이직 분석 등을 활용한 위기업종 발굴·진단 및 직무훈련 제공, 기후창업 등 근로자·기업·지역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

- \* 산업전환에 대응한 훈련과정 공급, 공동훈련센터 구축 등 훈련 인프라 확대
- \*\* '30년까지 내연기관 부품기업 중 1,200개社를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 목표

### ④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

① **(기후적응기반 구축)** 적응주체별 협력 및 기후위험 예측력을 강화하고, 재난대응 인프라 확대와 기술개발 등 사회 전반의 적응능력 제고

- \* 정부-산업계 거버넌스 구축 및 관계부처 적응협의체 운영, 취약계층 지원 강화
- \*\* AI 홍수경보, 산불·산사태 조기경보 등 기후위기 감시 인프라 확대
- \*\*\* 대심도 빗물터널 추가설치, 수원·대체수자원 확보, 이상기온 대응 품종 개발

② **(국제사회 선도)** 미국, EU 등 주요국과의 기후대응 연대를 강화하고, 그린 ODA 및 국제감축사업 등으로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

- \* '25년까지 그린 ODA 사업 비중을 OECD 수준으로 확대

③ **(이행관리)** 과제별 정량지표 선정 등 객관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, 상시 이행관리 및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히 실천

## V. 중장기 감축 목표

### □ 국가 감축목표

- '30년 배출량 목표는 436.6백만톤('18년 대비 40% 감축)으로 유지하여 지난 '21년 국제사회에 약속한 NDC 상향안\*의 감축목표 준수
  - \* '18년 대비 26.3% → 40% 감축 ('21.10 국무회의 심의 → '21.12 UN 제출)
- 다만, 감축수단별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부문간·부문내 일부 조정
  - 산업부문은 원료수급 곤란 및 기술전망 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
  - 부족한 감축량(800만톤)은 ①전환 부문(태양광·수소 등 청정에너지)과 ②국제 감축 부문을 각 400만톤씩 확대하여 국가목표 달성

### □ 부문별 감축목표

(단위: 백만톤CO<sub>2</sub>e, 괄호는 '18년 대비 감축률)

구분	부문	2018년 배출량	2030 목표	
			기존 NDC ('21.10)	수정 NDC ('23.3)
배출량 합계		727.6	436.6 (40.0%)	436.6 (40.0%)
배출	전 환	269.6	149.9 (44.4%)	145.9 (45.9%) <sup>1)</sup>
	산 업	260.5	222.6 (14.5%)	230.7 (11.4%)
	건 물	52.1	35.0 (32.8%)	35.0 (32.8%)
	수 송	98.1	61.0 (37.8%)	61.0 (37.8%)
	농축수산	24.7	18.0 (27.1%)	18.0 (27.1%)
	폐기물	17.1	9.1 (46.8%)	9.1 (46.8%)
	수 소	(-)	7.6	8.4 <sup>2)</sup>
	탈루 등	5.6	3.9	3.9
흡수 · 제거	흡수원	(-41.3)	-26.7	-26.7
	CCUS	(-)	-10.3	-11.2 <sup>3)</sup>
	국제감축	(-)	-33.5	-37.5 <sup>4)</sup>

※ 기준연도('18) 배출량은 총배출량 / '30년 배출량은 순배출량 (총배출량 - 흡수·제거량)

- 1) 태양광, 수소 등 청정에너지 확대에 400만톤 추가 감축
- 2) 수소수요 최신화(블루수소 +10.5만톤), 블루수소 관련 탄소포집량은 CCUS 부문에 반영(0.8백만톤)
- 3) 국내 CCS 잠재량 반영(0.8백만톤), CCU 실증경과 등을 고려한 확대(0.1백만톤)
- 4) 민간협력 사업 발굴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량 400만톤 확대

□ 부문별 · 연도별 감축목표

(단위: 백만톤CO<sub>2</sub>e)

부문	2018 (기준연도)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합계	686.3*	633.9	625.1	617.6	602.9	585.0	560.6	529.5	436.6**
전환	269.6	223.2	218.4	215.8	211.8	203.6	189.9	173.7	145.9
산업	260.5	256.4	256.1	254.8	252.9	250.0	247.3	242.1	230.7
건물	52.1	47.6	47.0	46.0	44.5	42.5	40.2	37.5	35.0
수송	98.1	93.7	88.7	84.1	79.6	74.8	70.3	66.1	61.0
농축수산	24.7	22.9	22.4	21.9	21.2	20.4	19.7	18.8	18.0
폐기물	17.1	15.1	14.7	14.1	13.3	12.5	11.4	10.3	9.1
수소	(-)	3.4	4.1	4.8	5.5	6.2	6.9	7.6	8.4
탈루 등	5.6	5.1	5.0	5.0	4.9	4.8	4.5	4.2	3.9
흡수원	-41.3	-33.5	-31.3	-28.9	-30.4	-29.1	-28.3	-27.6	-26.7
CCUS	(-)	-	-	-	-0.4	-0.7	-1.3	-3.2	-11.2

\* 국제사회에 제출된 '18년 총 배출량은 727.6백만톤이나 순배출량 기준으로는 686.3백만톤이며, 모든 연도별 합계는 순배출량 기준(부문별 소수점 첫째자리 아래 절삭)

\*\* 국제감축은 관련 국제기준 확정, 최초 활용시기('26년 예상)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목표를 설정할 예정으로 '30년 목표에만 반영

# VI. 국가 탄소중립 · 녹색성장 기본계획

## 1. 국가 기본계획 체계도



## 2. 부문별 중장기 감축 대책

### 1) 전환 부문 (‘18년) 269.6 → (‘30년) 145.9백만톤 (△45.9%)

□ (추진방향) 원전·재생e 보급 가속화 및 시장기반 수요효율화

□ 추진과제

○ (에너지 전환) 화석연료를 감축하고 원전·재생e로 에너지 전환

- 화석연료 : 가동년수 30년 이상 석탄발전을 폐지(‘36년까지 28기)하고, 친환경 기술개발을 전제로 수소·암모니아 혼소 발전 추진

- 원전 : 신한울 3·4호기를 조속히 건설\*하고, 기존 원전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경제성·에너지 안보 등을 감안하여 계속 운전

\* (‘23)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부지정지 공사 → (‘24) 건설허가 및 본관 기초굴착

- 신재생e : 해상풍력 확대를 통한 에너지원별 균형 보급 추진\*

\*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(‘22) 9.2% → (‘30) 21.6%+α

태양광-풍력 비율 (‘21) 87:13 → (‘30) 60:40

- 청정e 추가 확대 : 전환부문에서 추가 감축되는 400만톤은 태양광·수소 등 청정e를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, 차기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시 국내 여건을 감안해 세부내용 조정·반영

○ (재생e 기반 강화) 전력계통망과 에너지 저장체계를 확충\*하고, 재생e에 대한 주민수용성 강화\*\* 및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체계 구축\*\*\*

\* 예비력 확보가 긴요한 지역 內 변전소, 재생에너지 집중지역 등에 설치

\*\* 인접주민·농어업인 수익 우대, 투자한도 세대당 기준 강화 등 주민참여사업 개편

\*\*\* RE100 기업 Alliance를 구축하고 금리·보험 우대, 발전사업 용자 등 지원

○ (수요효율화) 산업·건물·수송 등 수요효율화 혁신\*을 추진하고, 시장 원리에 기반한 합리적 에너지요금 체계\*\* 구축

\* 대형건물의 목표 에너지원단위 관리 제도화, 전기차 에너지 효율 등급제 도입, ICT를 활용한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(AMI) 및 에너지관리시스템(EMS) 보급 확대 등

\*\* 총괄원가 보상원칙 및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 확립

## 2) 산업 부문 (<sup>'18년</sup> 260.5 → (<sup>'30년</sup> 230.7백만톤 (△11.4%)

□ (추진방향) 탄소중립을 기회로,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

□ 추진과제

- (기술확보) 한계돌파형 기술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\*하고, 해외기술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유연하게 신기술 확보
  - \* 기술혁신펀드 조성(~'24년, 1조원), 탄소중립기술 가치평가체계 및 거래 플랫폼 확충 등
- (투자지원) 탄소차액계약제도(CCfD)\* 도입 등 탄소저감 보조·융자\*\* 확대
  - \* 기업이 저탄소 기술을 도입할 경우 정부가 일정기간 고정된 탄소가격을 보장하여 감축투자 유도
  - \*\* 대규모 선도 프로젝트에 특별융자사업 지원('23년 1,470억원), 위험대응 정책금융 강화 등
- (배출권) 할당방식 개선\*을 통해 기업의 감축활동을 유도하고, 제도 이행 유연성\*\* 및 감축설비지원 확대로 기업 부담 완화
  - \* 유상할당 비율상향 및 대상확대, 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 확대(전체 배출량 75% 이상, '26~)
  - \*\* 국가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 수준의 배출권 이월·상쇄 한도 조정 검토
- (거버넌스) 정부-산업계 소통 강화를 위한 협의체 확대 운영\*
  - \* 산업전환 상생 협의체,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등을 통해 정책에 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

## 3) 건물 부문 (<sup>'18년</sup> 52.1 → (<sup>'30년</sup> 35.0백만톤 (△32.8%)

□ (추진방향) 건축물 성능개선 및 기준강화를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

□ 추진과제

- (건물) <sup>신축</sup>제로에너지건축물(ZEB) 확대\* 및 사후관리 추진, <sup>기축</sup>그린리모델링 확산\*\*
  - \* 신규 공공건축물 ZEB인증 의무화 대상 확대, 민간건축물 설계기준 ZEB 수준으로 상향
  - \*\* 건축물 에너지 총량제와 연계하여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로드맵 마련('24)
- (에너지 효율 향상) 건물 효율 평가관리\*와 건물 성능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효율 개선을 유도하고, 공공부문의 선도적 감축 강화\*\*
  - \* 대형 건물에 효율목표 부여와 에너지소비량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미달성시 개선명령·과태료 부과
  - \*\* 정부부문(중앙·지자체)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('23)
- (국토공간) 국토·도시계획상 탄소중립 가치\*의 이행관리를 강화하고, 계획·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\*\*
  - \* 공간구조 개편, 녹색교통, 녹색건축물, 탄소흡수원 확충,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
  - \*\* ('22) 에너지 개발, 산단 조성, 도시개발 등 7개분야 → ('23) 도로, 공항, 폐기물처리시설

#### 4) 수송 부문 (<sup>'18년</sup> 98.1 → (<sup>'30년</sup> 61.0백만톤 (△37.8%)

(추진방향) 육상·해양·항공 등 모빌리티 전반의 탄소중립화

추진과제

- (무공해차 전환) 전기·수소차 보급 확산\* 및 충전인프라를 확충\*\*하고, 경량소재, 저탄소 연료 기술 개발과 함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확대\*\*\*
  - \* '30년까지 전기·수소차 450만대 보급을 위한 구매촉진, 공공부문 의무구매 등
  - \*\* '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123만기 이상, 수소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
  - \*\*\* (기존) 5등급 경유차,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→ (확대) 4등급 경유차, 지게차, 굴착기까지
- (내연차 관리) 전주기평가를 기반으로 온실가스·연비기준을 상향하고, 대중교통·자전거 등 활성화\*를 통해 내연차 수요 관리 강화
  - \* 대중교통 인센티브(환승할인, 요금제 등) 다양화, 개인형이동수단(PM)-자전거의 접근성 강화
- (철도·항공·해운) 친환경 철도교통 강화\*, 친환경연료 확대, 저탄소 선박기술 고도화 등 모든 운송수단의 저탄소화 추진
  - \* 선로 전철화 확대, 전 디젤여객열차 전기열차로 교체('29), 수소열차 개발·실증

#### 5) 농축수산 부문 (<sup>'18년</sup> 24.7 → (<sup>'30년</sup> 18.0백만톤 (△27.1%)

(추진방향) 저탄소 구조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 실현

추진과제

- (농업)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을 확산시키고, 논물관리·질소질비료 감축 등 저탄소 농업기술 적극 보급\*
  - \* 스마트온실 보급(~'27년 1만ha), 질소질비료 저감('17년 149 → '30년 115kg/ha)
- (축산업) 저메탄·저단백 사료 개발·보급으로 축사 온실가스를 저감하고, ICT 기반 과학적 관리를 통해 사료 절감 등 사육구조 개선\*
  - \* 저메탄사료 보급(~'30년 30%), 스마트축사 보급(~'27년, 11,000호)
- (수산업) LPG, 하이브리드 등 저탄소·무탄소 어선을 개발·보급하고,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, 양식·수산가공시설에 지능형 에너지 관리 확대\*
  - \* LPG·하이브리드 어선 기술 확보('25), 히트펌프·인버터 등 에너지 저감설비 보급 등

## 6) 폐기물 부문 (‘18년) 17.1 → (‘30년) 9.1백만톤 (△46.8%)

□ **(추진방향)** 사회·경제 전 부문에서의 자원순환 고리 완성

□ **추진과제**

- **(폐기물 감량)**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감량 설비 지원, 일회용품 감량 및 대체 신산업 육성 등으로 생산·소비과정의 폐기물 원천 감량
- **(폐자원 공급)** 공공책임수거를 도입하는 등 수거체계를 개선하고, 선별시설을 현대화\*하여 유용폐자원의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
  - \* 공공선별장(187개) 선별시설 현대화(手 선별 → AI 및 광학선별) : (‘22) 22% → (‘23) 27%, 효율이 낮은 노후 선별장은 폐쇄 후 신규시설로 교체(‘25년까지 65개소)
- **(재활용 확대)**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목표 전과정 확대,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\*, 태양광 폐패널 및 전기차 폐배터리\*\*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
  - \* 바이오가스화 생산시설 확대(‘21년 110개소→‘30년 140개소)
  - \*\*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시행,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등

## 7) 수소 부문 (‘18년) (-) → (‘30년) 8.4백만톤 배출

□ **(추진방향)** 수소경제 전주기 생태계 구축으로 청정수소 선도국가 도약

□ **추진과제**

- **(생산 활용)** 그린수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, 수소발전\*·모빌리티\*\* 등 활용 확대
  - \* 청정수소 발전비중 (‘22) 0% → (‘30) 2.1% → (‘36) 7.1%    \*\* 수소 선박·트램·드론 등
- **(인프라)** 수소 활용을 위한 배관망을 구축하고, 시범항만 조성(2개소, ‘28)
- **(생태계)** 수소분야 안전기준을 마련하고, 수소 클러스터\*·수소도시\*\* 등 지역별 생태계 확대
  - \* 재생에너지 활용 수소생산(전북), 수소액화 플랜트(강원), 연료전지 발전(경북), 수소 모빌리티(울산) 기반 클러스터 조성
  - \*\* 수소도시(평택, 남양주, 당진, 보령, 광양, 포항) 조성(‘23~) 및 단계적 확대

## 8) 흡수원 부문 (‘30년) -26.7백만톤 흡수

□ (추진방향) 흡수원의 양적·질적 확대를 통한 탄소 흡수량 증대

□ 추진과제

- (산림) 산림순환경영·목재 이용을 확대하여 흡수·저장 기능을 증진\*하고, 핵심 산림생태축 복원 및 보호지역 확대, 산림재해 최소화로 흡수원 보전  
\* 숲가꾸기(‘21년 217천ha → ‘50년 480천ha), 국산목재생산(‘20년 440만m<sup>3</sup> → ‘50년 800만m<sup>3</sup>)
- (해양) 연안습지 복원·보호\*, 바다숲 조성 등 해양 흡수원 확대  
\* 갯벌 복원 : (‘22) 1.5km<sup>2</sup> → (‘50) 30km<sup>2</sup>
- (신규 흡수원) 도시숲, 내륙 습지 및 유휴토지 조림 등 신규 흡수원 확충\*  
\* ‘50년까지 도시숲 1.7만ha, 수변구역 등 생태흡수원 1.16만ha 조성

## 9) CCUS 부문 (‘30년) -11.2백만톤 흡수·처리

□ (추진방향) CCUS 인프라와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 신산업 창출

□ 추진과제

- (제도) CCUS법 제정\*, CCUS 총괄협의체 활성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
\* CO<sub>2</sub> 포집·저장·활용의 정의와 산업육성, 안전규정, 인증기준 등
- (기술개발) CCUS 기술개발\* 및 실증사업 확대로 중점기술 확보  
\*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, 실증·사업화 플랫폼 구축(‘26) 등
- (인프라) CCUS 실증을 위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, 국내·외 저장소 개발\*  
\* (국내) 유망구조 도출 및 저장 규모 확인 (해외) 호주말레이시아 등 협력을 통한 저장소 개발

## 10) 국제감축 부문 (‘30년) -37.5백만톤 감축

□ (추진방향) 적극적 사업 발굴과 신속한 추진으로 전 지구적 감축 기여

□ 추진과제

- (기반구축) 사업지침 정비, 민관합동 지원 플랫폼 활성화 등 이행 기반 마련
- (사업발굴) 주요국\*과 양자협정을 조기 체결하여 부문별 사업을 적극 발굴  
\* 베트남, 몽골, 가봉, UAE, 인도네시아 등

### 3. 기후변화 적응대책

#### 1 과학기반 기후위기 감시·예측 및 적응정보 고도화

- (감시·예측) 지상관측망·위성을 활용하여 입체적 감시역량을 강화하고,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예측 정보 제공
  - (적응정보) 폭염·홍수 등 위험요인별 기후위험지도를 구축\*하고, 적응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부문별 적응정보 제공 일원화
- \* 과거·현재·미래 기상·기후 변화에 따른 가뭄, 홍수, 산불 등 요인별 위험도 표출('24~)

#### 2 적응 인프라·대응체계 개선으로 극한기후에 안전한 사회 실현

- (홍수·가뭄) AI 활용 홍수 예보로 예보시간을 단축\*하고, 가뭄취약지도 구축 및 침수·범람 방지 인프라 확충으로 대응력 강화
- \* 홍수 경보시간 단축(3시간전 → 6시간전), 특보지점 확대('22년 75 → '27년 223개소)
- (폭염·한파)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정보제공 및 무더위·한파 쉼터를 확대하고, 범부처 이상기온 대응·피해예방 대응체계 강화
  - (대응체계)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또는 (가칭)기후변화적응법 제정을 통한 법적 기반 강화, 산악기상관측망 구축 등 자연재난 정보제공 체계 강화

#### 3 보건·생활환경·농수산업의 변화를 극복한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

- (보건) 폭염·한파 대비 응급실 감시체계를 강화하고, 기후위기 기인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\* 확대
- \* 기후변화 관련 매개체 감염병 발생기전 연구 및 진단 기술·치료 후보물질 개발 등
- (생태계) 위성·센서 기반 모니터링\*을 확대하고, 생물다양성 증진\*\* 추진
- \* 기후변화 지표종, 취약종, 교란종, 외래종, 유해종, 위해종 등 조사·분석
- \*\* 자생생물 조사·증식연구, 천연기념물·멸종위기종 유전자원 보전 및 인공증식·복원 등
- (농수산) 농장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확대 구축\*하고, 기후 적응형 생산기술\*\* 개발·보급
- \* ('21) 40개 사군 → ('27) 155개 / \*\* 스마트온실(~'27년 10,000ha), 스마트축사(~'27년 11,000호) 등

#### 4 적응주체 모두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

- (협력기반) 시민사회·청년 등 모든 이행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('23)하고, 적응사회 실현에 필요한 법적 기반 강화\*
- \* 적응주류화,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, 적응주체별 구체적 적응대책 마련 등
- (취약계층) 저소득층·고령층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을 통해 부담을 경감하고, 보건복지 안전망 구축\*
- \* 노인 맞춤형돌봄 서비스, 보건소 방문건강관리, 환경보건이동학교 운영 등

## 4. 환경과 공존하는 녹색산업 성장

### ① R&D 투자 확대와 상용화 지원을 통한 녹색기술 혁신

- (기술개발) 기후기술 기본계획 및 탄소중립 기술혁신 로드맵(22년)을 이행하고, 한국형 100대 핵심기술\* 지속 육성
  - \* 에너지 전환, 산업, 수송, 건물·환경 4개 부문의 17개 분야를 대상으로 기술 선정
- (상용화) 연구개발특구\*를 탄소중립 테스트베드로 조성(23~)하여 탄소중립 유망 신기술의 실증기반을 마련하고 조기 상용화 추진
  - \* 전국 19개(광역 연구개발특구 5개 + 강소 연구개발특구 14개)
- (기반) 범부처 R&D 컨트롤타워를 구축\*하고, 전과정(기획~상용화) 관리\*\* 강화
  - \*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간 유기적 연계 강화
  - \*\* 민·관 협력을 통한 R&D 수요 지속 발굴 → 지역·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실증 추진

### ② 탄소중립 시대의 지속가능한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

- (기초·에너지산업) 저탄소 소재·부품·장비 및 재제조산업을 육성\*하고, 에너지신산업 핵심기술(수소에너지·태양전지·에너지저장장치 등)을 조기에 확보
  - \* 차세대 이차전지·반도체·바이오소재 등 기술 개발, 공급망 구축, 제품인증, 수요처 확대 등
- (스마트 녹색산업) 4차 산업혁명 기술(VR·AR 활용 원격운전 등)로 녹색산업을 혁신하고, 유망기업 지원\* 및 스마트 생태공장 확대
  - \* '그린 스타트업 2000'을 통해 연간 400개사에 창업교육·멘토링, 사업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
- (규제합리화) 민·관 협업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·개선하고, 저탄소 기술 실증특례·임시허가 허용 및 재생e 입지·인허가 규제개선 추진

### ③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및 기후리스크 대응 금융안정 확보

- (지원확대) 탄소중립에 대한 기후대응기금·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, 재정기능이 강화되도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지속 개선\*
  - \* 감축 → 배출·적응까지 대상범위 확대, 방법론 고도화, 지방재정 적용 등
- (탄소중립금융) 환경정보공개 대상기업을 단계적 확대\*하고, 채권 외 금융상품에 대한 녹색분류체계 적용방안 마련 추진(23~)
  - \* 환경정보공개 대상기업 범위 : (22) 자산총액 2조원 → (30) 쉐 코스피 상장사
- (기후리스크 관리) 「기후경제 시나리오」를 마련(23)\*하고, 국민연금의 석탄채굴·발전산업 분야 투자 제한전략 시행방안 마련
  - \*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가 미래 거시경제·금융에 미치는 영향 분석

---

## 5. 정의로운 전환

---

### 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

- (제도·전략)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근로자·기업·지역에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\* 마련, 민관 합동 기후 테크 육성 전략 수립
  - \*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
- (거버넌스) 다양한 주체의 논의 및 소통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'정의로운전환 거버넌스'를 구축·운영
  - \* 청년, 여성, 노동자, 농어업인, 중소기업인, 시민사회단체 등
- (특별지구) 지역·산업별 선제적인 영향조사\*를 실시하고, 산업·고용상태 악화 우려지역은 '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'로 지정하여 지원
  - \* '23년부터 매년 4.7억원 규모로 추진 계획
- (지원센터) 중앙·지방에 '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'를 설립·운영\*하여 특별지구 지원모델 개발 및 컨설팅 등 지원
  - \* (중앙정부) 고용부 - 한국고용정보원, 산업부 -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
(지자체) 특별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설립·운영

### ② 전환으로 인한 주요 영향집단을 촘촘하게 지원

- (산업·기업) 중소·중견기업 등에 대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, 맞춤형 컨설팅·금융 등 기업지원 수요대응 강화
  - \* '24년 일몰 예정인 사업재편제도 상시화, 맞춤형 사업 전환 컨설팅 등 추진
- (노동자) 산업전환에 따른 위기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, 재직자·실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프로그램 제공
  - \*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비용지원, 전직지원 서비스 실비 지원 등
- (농민) 저탄소 농업활동에 따른 추가비용 및 소득손실분을 지원하고, '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' 설립('23~'26)을 통해 저탄소 농업기술 교육 확대
- (어민) 탄소저감 활동·기술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, 해상풍력에 대한 어업인 이익공유 모델 등 상생기반 조성

---

## 6.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· 녹색성장 확산

---

### ① 상향식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체계 구축

- (기반구축)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(재생에너지 보급 등)을 지원하고, 탄소중립 지원센터\* 확대
  - \* '22년 17개(광역) → '23년 37개(광역 17, 기초 20) → '27년 누적 100개소 설치·운영
- (역량강화) 국가 탄소수지 지도\*를 구축하여 지역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를 제고하고, 지역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기후대응 역량 강화
  - \* 국가 배출원 전분야(에너지, 산업공정, 농업, LULUCF, 폐기물), 1km x 1km 단위

### ② 중앙-지역 소통협력 강화 및 지역단위 공공부문 선도사업 확산

- (소통·협력) 지역 탄소중립 컨퍼런스를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, 중앙-지역 및 권역별 정기포럼 등으로 명확한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 활성화
- (지역사업) 탄소중립도시(Net-Zero City, ~'30년 10개) 대표모델을 육성하고, 유역·상하수도 시설을 활용한 재생e 생산 및 탄소저감 산단 조성 확대

---

## 7. 탄소중립 · 녹색성장 인력양성 및 인식제고

---

### ① 저탄소 미래분야 인력양성을 통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반 구축

- (맞춤형 인재양성) 기후관련 학과·특성화대학원 등 대학 내 관련 학과 확대\* 및 대학과 지역, 기업이 연계한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
  - \* 첨단분야 학과개설요건 유연화, 폴리텍대학 저탄소분야 학과 신설(~'26년, 연간 5개과)
- (직업훈련 확대) 저탄소 산업분야에 대한 훈련과정을 확대하고, 국가직무표준(NCS) 개발, 인력현황 조사·분석 등 추진

### ② 국민공감과 참여 유도를 위한 실천교육 및 홍보강화

- (실천교육) 학교 교육과정 내 탄소중립 내용을 강화하고, 학교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, 체험관\* 등 학습의 장을 조성하여 전국민 교육 활성화
  - \* 환경교육센터, 기상과학관, 기후변화체험관, 에코스쿨 등
- (홍보강화) 탄소중립 통합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등 쌍방향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, 생활속 범국민 실천운동\*으로 확산
  - \*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, 탄소중립마을 조성, 공공·기업·시민사회간 협업 캠페인 강화 등

---

## 8. 탄소중립 · 녹색성장 분야 국제협력

---

- **(기후리더십 강화)** 기후 협상에서 선진국-개도국간 가교역할을 지속 수행하고, 감축, 국제 탄소시장, 적응 등 주요 협상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
- **(양·다자협력)** EU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등 新경제체제에 대응\*하고, P4G 등 민관협력체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대응 입지 강화
  - \* 국제통상규범(WTO/FTA) 합치성, 수출기업에 대한 차별 해소 등 적극 제기
- **(그린 ODA)** 그린분야 사업 확대\*로 국제감축을 측면지원
  - \* 전체 ODA 중 그린 ODA 비중을 '25년까지 OECD 평균 이상으로 확대

---

## 9. 이행 및 환류체계 운영

---

- **범부처 상설 이행 협의체 운영**
  - 탄녹위를 중심으로 중앙부처-지자체 상설협의체를 발족하고, 정례 회의 등을 통해 핵심과제 진행 상황 합동 점검 및 애로사항 해소
  - 다부처 관련 과제, 이행이 어려운 과제는 조기에 발굴하여 범부처 협의체를 중심으로 월별 계획 수립 및 이행
  - 이해관계자(청년·아동·미래세대 등)가 직접 목표 달성 점검에 참여하고 정책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정책 체감도 제고
- **감축목표·기본계획에 대한 법정 점검·평가 체계 운영**
  - (점검주체) 탄녹위 위원장(환경부장관이 지원)
  - (점검시기) 매년 해당 이행연도의 다음 연도 하반기(12월)까지 완료
  - (점검절차) ①탄녹위 점검계획 수립 → ②소관부처의 이행실적 제출 → ③종합보고서 작성(환경부장관 지원) → ④결과보고 및 대국민 공개

## VII. 재정투자 계획 및 경제적 기대효과

- 탄소중립·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('23~'27) 총 89.9조원 이상 소요 추정
  - 5년간 부문별 감축 대책(54.6조원), 기후변화 적응대책(19.4조원), 녹색산업 성장(6.5조원) 등
  - '23~'27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약 11.5%로, 과거 5년간 정부 전체 재정규모 증가율(연평균 8.0%) 수준 상회

(단위: 억원, %)

구 분	'23	'24 ~ '27	합계	연평균 증가율
<b>합 계</b>	<b>133,455</b>	<b>765,738</b>	<b>899,193</b>	<b>11.54</b>
▶ 부문별 중장기 감축 대책	79,480	466,283	545,763	11.48
▶ 기후변화 적응대책	29,856	164,213	194,068	9.43
▶ 녹색산업 성장	10,459	54,453	64,912	7.34
▶ 정의로운 전환	2,366	19,837	22,203	37.57
▶ 지역 탄소중립·녹색성장	4,602	30,319	34,922	25.36
▶ 인력양성 및 인식제고	5,999	26,881	32,881	2.11
▶ 국제협력	693	3,751	4,444	1.59

※ 구체적 투자 계획은 재정여건,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가능

### <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(한국환경연구원) >

- (분석모형) 단일국가 대상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(CGE 모형)\*을 활용하여 2030 온실가스 감축경로 이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
  - \*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주된 방법론
- (정책수단) 탄소가격의 세수는 고용지원에 집중 투자 한다고 가정하여 분석
- (경제영향) 기준경로(BAU)에 대비하여, '30년까지 GDP는 유사(연평균 0.01% 증가), 고용은 연평균 0.22% 증가 예상

